

# 04

## 데탕트의 위험과 기회

\_ 1970년대 초 박정희와 김대중의 안보인식과 논리

■ 마상윤 ■

### Contents

---

1. 들어가며
2. 박정희의 위기론
3. 김대중의 기회론
4. 남북대화과 북한의 통일전략
5. 나가며

1970년대 초 국제적 데탕트의 물결 속에서 박정희는 강대국 간의 긴장완화가 오히려 한국과 같은 주변국에는 위기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북한의 위협은 변함이 없는데, 동맹국으로부터의 외부지원을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정희는 자립경제기반과 자주국방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위기 상황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박정희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적 '총화단결'을 주장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나아가 대내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에 대해 김대중은 박정희가 정권안보를 위해 안보위기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김대중은 국제적 데탕트가 강대국 간 각축을 방지하여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인식했으며, 북한의 침공가능성도 낮다고 보았다. 김대중은 박정희 정부가 남북대화에 나선 동기도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당시 북한은 대남무력침공보다는 박정희 정부의 제거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해 평화공세에 집중하고 있었다. 따라서 박정희가 군사적 위협을 과장한 혐의는 인정된다. 그러나 박정희가 보다 두려워한 위협은 북한의 평화공세와 대내적 긴장이완이었으므로 박정희의 위기론이 정권안보용이었다고만 볼 수는 없다. 다만 북한의 통일전략이 한국 국민들의 통일희구를 북한에 대한 동조로 등치시키는 잘못된 전제에 근거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박정희가 북한의 선전선동을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주제어

김대중, 데탕트, 박정희, 북한, 안보

## 1. 들어가며

긴장완화를 의미하는 데탕트는 세계냉전의 역사에 있어서 독특한 시기를 지칭한다. 그 시기는 대체로 1960년대 말에서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전에 해당하는데, 미국과 소련을 각각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 긴장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상호교류가 모색되고 평화공존이 추구되었다. 냉전 초기의 이데올로기적 적대감이 어느 정도 누그러들면서 미국과 소련 등 냉전의 주요 당사국들은 진영 간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호 합의된 행위양식을 찾을 수 있었다. 냉전의 주도세력들이 잠시 치열한 군사적 경쟁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쉬면서 힘을 다시 비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은 긴장완화의 배경을 이루었다. 그러나 데탕트에는 한계가 있었다. 1979년 이후 '신냉전'의 도래가 보여주듯 미국과 소련은 공존을 추구하면서도 결코 스스로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양보는 허락하지 않았다. 데탕트는 냉전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냉전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었던 것이었다.

데탕트는 미국이나 소련 같은 초강대국의 단일한 기획에 의해 추진된 현

상이 아니라 여러 행위자들의 다양한 동기에서 비롯한 정책적 행동이 합쳐지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데탕트의 배경을 이룬 가장 중요한 흐름은 냉전진영의 내적 분열이다. 서방진영에서 프랑스의 드골(de Gaulle) 정부는 미국 중심적 질서 내에 머무르기를 거부하며 1966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탈퇴하였다. 서독도 196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권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였다. 특히 1969년 브란트(Brandt) 총리가 이끄는 사민당이 동방정책(Ostpolitik)을 추진하여 동독을 비롯한 공산국가들과 현상유지를 전제로 한 긴장완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공산진영의 분열, 특히 소련과 중국의 갈등은 데탕트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53년 스탈린의 사망 이후 시작된 두 사회주의 대국 간의 마찰은 1960년대 말 국경지역에서의 무력충돌로 이어질 정도로 격화되었다. 1969년 취임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중소갈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미국의 전략적 주도권을 새롭게 하기 위한 소위 삼각외교(triangular diplomacy)를 추진하였다. 그것은 바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로써 소련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임하도록 간접적 압력을 가하는 전략이었다. 소련과의 갈등으로 인해 안보 부담이 컸던 중국도 미국의 관계 개선 타진에 긍정적으로 응했다. 1971년 키신저의 비밀 방중에 이어 이듬해 2월 닉슨의 북경방문이 이루어졌다. 미소관계도 개선되어 전략 무기제한협정이 체결되고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열리는 등의 성과가 도출되었다.

한반도 국제정치도 데탕트의 전개와 함께 요동쳤다. 독일에서의 긴장완화는 같은 분단국인 한국에서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더욱 중요한 변화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변화와 함께 시작되었다. 베트남 전쟁의 종전을

모색하면서 나온 닉슨 독트린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적용되면서 1971년까지 주한미군 병력 2만 명이 철수하였다. 또한 미중 데탕트의 전개에 발맞추어 남북대화도 시작되었다. 1972년 7월 4일 발표된 남북공동성명은 한반도 미니 데탕트가 이루어낸 극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남북대화는 1973년 하반기 이후 동력을 잃고 한반도는 다시 긴장고조의 국면으로 되돌아갔다.

국제적 차원에서 강대국 간의 데탕트는 10년가량 지속되었지만 한반도에서의 데탕트는 그보다도 짧은 기간 스쳐지나간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데탕트의 근본적 한계를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데탕트라는 국제적 흐름을 어떻게 읽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치열한 안보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그것이 미친 영향은 예컨대 햇볕정책에 대한 논쟁에서 보듯이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이 논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박정희와 김대중의 논리와 견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물론 당시 이들의 논쟁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의 논쟁은 아니었다. 장소와 시간을 함께하며 이루어지는 토론이 아니었음은 물론이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보다는 불신과 적개심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날선 공방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안보논쟁은 토론을 통해 서로의 지혜를 모으려는 공동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교환 정도로 파악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통일 및 안보관련 사안에 대해 박정희 정부는 사실상의 독점권을 행사하며 자신과 다른 의견과 논리를 배제하려 했다는 지적도 타당성이 있다.<sup>1)</sup> 최근 1970년대 초 한반도 국제정치사에 관

1) 홍석률, 「1971년 대통령선거의 양상: 근대화 정치의 가능성과 위험성」, 『역사비평』 (2009), 87호, pp. 475-476.

한 연구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당시의 안보논쟁에 주목하고 이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드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를 안보논쟁 자체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냉전의 한 시기적 현상으로서의 데탕트는 군사적 대립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데탕트시기에 정치전 내지 사상전의 중요성이 군사적 대립이 두드러지는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컸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안보논쟁은 논쟁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는 우선 박정희와 김대중이 데탕트에의 대응을 놓고 벌였던 논쟁을 정리하고 각각의 논리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당시 북한의 통일전략을 살펴본 후, 이에 비추어 박정희와 김대중의 안보논쟁이 한반도 냉전의 맥락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 2. 박정희의 위기론

위기(危機)라는 말 자체가 그러하듯 위기에는 언제나 위협과 기회의 가능성이 모두 담겨있다면 1970년대 초 데탕트와 함께 찾아온 국제질서의 급변도 위협과 기회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와 기회의 교차점에서’ 정부와 야당의 주요 지도자들은 대조적인 상황인식과 주장을 보여주었다. 박정희는 국제질서변화에 따르면 위협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반면 당시 가장 두드러진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은 데탕트

가 제공하는 한반도 긴장완화의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sup>2)</sup> 그렇다면 이들이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것은 각각 무엇이었나?

박정희는 1970년대 초가 “국가안보상 중대한 시기”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sup>3)</sup> 국제적인 긴장완화의 흐름이 오히려 한국에서는 안보위기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자주 국방력의 확보와 “총력안보” 태세의 확립을 추구하고, 국민들에게도 그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박정희는 안보위기의 근거를 크게 세 가지 요인에서 찾았다.

첫째, 박정희는 국제정세의 변화, 그 중에서도 특히 닉슨 독트린과 이에 따른 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의 철수결정을 한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였다. 예컨대 “북한이 전쟁도발을 못하는 주된 이유는 주한미군 때문이다”라는 박정희의 발언은 역으로 주한미군이 더 이상 한국에 주둔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sup>4)</sup> 1969년 공표된 닉슨 독트린은 기본적으로는 베트남전으로부터 ‘명예롭게’ 빠져나오려 하는 닉슨 행정부의 의도를 담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책무를 축소한다는 일반적 차원의 정책으로 발표된 이상 한국에 대한 적용여부가 문제로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닉슨 독트린의 적용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2) 홍석률, 「닉슨 독트린과 박정희 유신 체제」, 『내일을 여는 역사』(2006, 겨울), 제26호, p. 78.

3) 「신년사」, 1971년 1월 1일. 이하에서 인용하는 박정희의 연설문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온라인 콘텐츠 연설기록 섹션인 [http://www.pa.go.kr/online\\_contents/speech/speech\\_submain.html](http://www.pa.go.kr/online_contents/speech/speech_submain.html)을 통해 볼 수 있음.

4) A-323 from American Embassy Seoul, “President Park Speaks on Korean Defense and the Possibility of Troop Withdrawal”, October 2, 1969, Subject Files of the Office of Korean Affairs, 1966-74, Box 8, Entry 5419, RG 59,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이하 NARA].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1969년 8월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여 닉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에서 박정희가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명시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닉슨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박정희를 만족시켰다. “김일성이가 도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이때 한국에 있는 미군을 철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여론이 어떻든 간에 한국으로부터의 미군의 철수는 예외로 취급할 예정입니다”라는 것이었다.<sup>5)</sup> 박정희는 귀국성명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변화가 있다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기본 정책 전환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상 박정희와의 회담이 열린 당시에 닉슨 행정부는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검토 중이었으며, 이러한 작업은 한미정상회담 후에도 계속되었다.<sup>6)</sup> 박정희와 정상회담을 가진지 3개월 후인 11월 24일 닉슨 대통령은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주한)미군 병력수를 절반으로 줄일 때가 되었다”며 연말까지 그 실행계획을 준비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sup>7)</sup> 이후 1970년 3월 초 닉슨은 “1971회계연도 말까지 미군 2만 명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는 계획”을 결정했다.<sup>8)</sup> 이에 따라 3월 27일 포터(William J. Porter) 주한 미

5) 「한·미정상간 제1차 단독회담 요약」, 1969년 8월 21일, 「박정희 대통령 미국방문, 1969. 8. 20~25」 제1권 기본문서철, 마이크로필름 C-33, 파일 1,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이 내용은 최근 공개된 미국 정부의 기록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Although ... public opinion here demands reduction of troops we have all over the world, I rejected the idea of decreasing the number of our men staying in the ROK. I will make this view clear to the public to warn Kim Il-Song.” Memorandum of Conversation, “Talks between President Nixon and President Park,” August 21, 1969, [http://www.nixonlibrary.gov/virtuallibrary/documents/mr/082169\\_korea.pdf](http://www.nixonlibrary.gov/virtuallibrary/documents/mr/082169_korea.pdf).

6) 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 27, February 22, 1969, NSSM, RG 273, NARA.

7) Nixon to Kissinger, November 24, 1969, Box H-41, NSC Institutional Files, Nixon Library.

8) 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 48, “U.S. Program in Korea”, March 20, 1970, NSDM, 1969~76, RG 273, NARA.

대사는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해 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1개 사단 철수 의사를 통보하고, 철수의 시기와 조건 등 그 실행을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제의했다.

닉슨 행정부의 미군 철수를 위한 협의 제의는 한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정부의 철군협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국회도 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합의문을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물론 박정희가 주한미군이 무한정 주둔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이 닉슨 독트린에 따라 아시아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려는 소위 ‘불개입 정책’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추세였다. 다만 박정희는 대미외교, 특히 닉슨과의 회담을 통해 적어도 미군 철수의 시기를 어느 정도는 늦추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확보한 시간 동안 “언젠가 미군이 철수할 경우에 대비해서 자주적 국방능력을 키워야한다”고 구상하고 있었다.<sup>9)</sup>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다는 기대에 어긋나게 닉슨 행정부는 철군을 빠르게 추진했고, 박정희 정부의 입장에서는 닉슨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 나아가 배신감마저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철군을 위한 협의 자체를 거부하였으나 결국 미국이 한국군 현대화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 1개 사단의 감축에 합의하였다.<sup>10)</sup> 이 합의는 1971년 2월 6일 공식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닉슨 행정부는 주한미군 병력 2만 명을 1971년 말까지 철수시켰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추가로 감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었으며, 박정희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

9) A-323 from American Embassy Seoul, October 2, 1969.

10) 1970-71년 주한미군 철수를 둘러싼 한미협상과정에 대한 검토로는 Sang-Yoon Ma, “Alliance for Self-reliance: R.O.K.-U.S. Security Relations, 1968-71,” 『미국학논집』(2007), 제39집 1호. 특히 pp. 196-205 참조.

다.<sup>11)</sup> 그리고 추가감군이 현실화될 경우 대북억지력이 더욱 약화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움직임도 박정희 정부에게는 우려스러운 현상이었다. 1969년 8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광범한 완화조치와 관련하여 닉슨은 박정희에게 “중공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자유중국을 지지하는 데도 하등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었다. 그러나 1971년 7월 15일 닉슨 대통령은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동안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하여 회담을 가졌다는 사실을 공개함과 동시에 이듬해에 자신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닉슨의 중국방문은 1972년 2월에 이루어졌는데, 그에 앞서 1971년 9월 16일자로 박정희는 닉슨에게 극비서신을 보내 중국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것이었다. 박정희는 “아세아에 있어서의 중공의 오랜 목표의 하나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 및 기타의 아세아지역으로부터 미군을 철수케하려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한국으로부터의 이른바 외군 철수를 주장하는 중공의 요구는 결코 수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sup>12)</sup>

닉슨 행정부의 중국과의 관계 개선노력은 박정희 정부에게 기존 동맹관계의 골격이 흔들리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미국은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한국의 안보를 맡길 수 있는

11) 1971년 12월 6일 발표된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즈음한 특별담화문」에서 박정희는 “주한미군의 추가 감군 문제도 이미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밝혔다.

12) 박정희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1971년 9월 16일, POL 7 KOR S, Central Files 1970-73, RG 59, NARA.

대상은 아니라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냉혹하기가 짝이 없”는 국제정치 속에서 “모든 나라들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어제의 적국을 오늘의 우방으로 삼고” 있으며, “이른바 강대국들이 제각기 자기들의 국가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바, 미국 역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sup>13)</sup> 그리고 미국의 국익이 한국의 국익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책임져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깨달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의 배양에 힘써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이상에서 지적한 위기의 요인들은 모두 북한으로부터의 상시적 위협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 시기 안보문제에 대한 박정희의 연설이나 발언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이 언급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것인가에 대해서는 박정희의 설명이 때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박정희는 1969년 1월 신년사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무력도발이 임박했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적이 지금 노리는 것은, 당장에 전면전쟁을 도발하겠다는 생각보다도, 혼란된 간첩과 무장게릴라 부대를 계속 남파시켜서, 남한의 치안을 교란하고 파괴와 살인을 자행함으로써 사회와 민심을 불안케 하여,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건설의 속도를 둔화시키고, 나아가서는 대외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점차 제2의 월남과 같은 불안한 지역이 되어간다는 인상을 주자는 것이고, 그들의 이러한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확실할만한 시기가 온다면, 결정적인 시기를 선택해서 결정적인 무력 침략을 감행하자는 것이 분명합니다.<sup>14)</sup>

북괴가 무력으로써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벌써 오래 전부터 전

13) 「신년사」, 1971년 1월 1일; 「4·27 대통령선거 대전유세연설」, 1971년 4월 10일;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유시」, 1972년 3월 30일.

14) 「신년사」, 1969년 1월 1일.

쟁 준비에 전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 문제는 김일성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도발 행위를 해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김일성의 괴뢰정권이 제아무리 날뛰고 광분을 하더라도 소련이나 중공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한국에 있어서 전면전쟁을 도발할 능력은 없다고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전쟁을 도발했을 때는 스스로 자멸을 초래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둔한 김일성이라 할지라도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적의 능력으로서 가능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제한된 목표에 대한 제한된 기습공격 이런 것은 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휴전선 일대에서 한다든지 해안선 등에서 한다는 등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적이 많이 훈련하고 있는 게릴라 부대를 후방에 침투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의 후방을 교란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 중에 있어서 우리가 현 단계로서 가장 가능한, 적이 많이 하리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역시 세 번째 게릴라 부대를 침투시켜서 후방 교란작전을 한다, 이것이 가장 가능한 방책이고 또 금년에 있어서도 적이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대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sup>15)</sup>

이상과 같이 박정희는 북한의 전면전 도발보다는 게릴라전을 통한 후방 교란을 더욱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전면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게릴라전으로 한국 내부에 혼란이 야기될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상의 설명이 북한의 대남무력도발이 극성을 이루었던 직후에 나온 것임을 감안하면 박정희가 비교적 차분하게 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도전에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와대 습격기도 사건과 미 해군 정보수집선 푸에블로 호 나포 사건 그리고 울진·삼척지구에 대규모 무장게릴라 침투 사건이 발생하는 등 1968년에 걸쳐 북한의 '모험주

15) 「기자회견」, 1969년 1월 10일.

의적' 대남전략은 절정에 달해 있었다. 북한으로부터의 안보도전이 이렇듯 가시적으로 제기되던 상황에서 국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국가지도자가 의도적으로 자신감을 피력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필요를 감안하더라도 박정희가 북한의 무력도발 그 자체를 극복하기 힘든 안보 도전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박정희는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기도 하였다.

70년대 전반기에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정세의 변화가 올 것이다. ...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 있어서는 이 70년대 초엽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며,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70년대 초기를 남한에 대한 무력 통일의 시기로 결정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sup>16)</sup>

70년대는 우리 한국의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중대한 시련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 북한 괴뢰집단은 70년대를 적화통일의 결정적 시기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으며, 그들의 기본전략은 조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70년대에 있어서 북괴의 도발은 현재보다도 우심해질 것입니다.<sup>17)</sup>

최근 북괴의 대남 침투의 방법과 양상이 달라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수에 있어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발 행위는 더욱 노골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북괴는 소위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를 이미 실현하였다고 호언하고 있으며, 재침의 구실과 기회를 엿보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sup>18)</sup>

16) 「교포를 위한 조찬회에서의 연설」, 1969년 8월 22일.

17) 「연초기자회견」, 1970년 1월 9일.

18) 「197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1970년 9월 2일. 그러나 포터 주한미국 대사는 박정희가 이 연설에서 1970년의 북한의 무력도발 건수가 지난 2년에 비해 감소했다는 사실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A-403 from American 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President Reaffirms Present Policies as Road to a Bright Future," September 25, 1970, POL 1 KOR S, Central Files 1970-73, RG 59, NARA. 1968년 북한의 도발횟수는 총

박정희는 북한의 남침위협을 근거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 주한미군 병력 감축이 북한으로 하여금 “결정적 시기”가 도래했다는 오산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 체제 자체에 내포된 문제점 때문에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북한이 “우리를 해가면서 한계를 훨씬 넘은 군사력과 군사비를 유지하느라고 찢쩍대고” 있고,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 북한이 이러한 자체모순을 대남군사도발을 통해 대외적으로 분출하려할 것이라는 것이다.<sup>19)</sup> 더욱이 “70년대 중반기를 넘었을 때에는” 남북 국력 격차가 확대될 것이므로 북한이 “대한민국이 빨리 커지기 전에” 무력으로 해치우려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20)</sup>

1971년 가을 이후 박정희와 정부요인들은 북한의 위협을 부쩍 더 강조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0월 1일 국군의 날 유사에서 박정희는 “북괴는 아직도 적화통일을 위한 무력남침을 포기한 징후가 하나도 없을뿐더러, 겉으로는 평화통일을 운운하면서, 내막적으로는 전쟁준비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괴가 평화 선전 공세를 취하는 이면에는, 작금의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기습적인 남침을 노리는 침략 야욕이 숨어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sup>21)</sup> 또한 북한의 동계기습공격 가능성도 빈번히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유재홍 국방장관은 11월 30일 북한이 ‘20일 전격전’ 전략을 채택했으며, 따라서 동계기간 중 북한의 기습공격 위협이 높

761회였으나, 1969년 134회로 줄었고, 1970년에는 11월 7일 현재 기준으로 96회로 감소하였다. Memorandum for Mr. Henry A. Kissinger, The White House, “Seasonal Increase in North Korean Infiltration,” November 7, 1970, POL 23-7 KOR S, Central Files 1970-73, RG 59, NARA.

19) 「연초기자회견」, 1970년 1월 9일.

20) 「4·27 대통령선거 대전유세연설」, 1971년 4월 10일.

21) 「제23회 국군의 날 유사」, 1971년 10월 1일.

아졌다고 주장했다.<sup>22)</sup>

이러한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조를 미국 정부는 우려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우려는 한국 정부의 북한위협 강조가 아시아에서의 긴장완화를 꾀하고 있던 닉슨 행정부의 노력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의심은 북한위협을 부풀려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sup>23)</sup> 1971년 말 미 국무부는 주한 미 대사에게 보낸 전문에서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후, 한국 정부의 북한군사위협에 대한 과장된 강조가 혹시 국내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표시하였다. 국무부는 특히 국회, 정당 및 언론을 옥죄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하였다.<sup>24)</sup>

실제로 미 국무부의 우려는 현실화되었다. 박정희는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대통령에게 안보와 경제문제에 대한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국가비상사태선언에 이어 이듬해 10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에서 유신체제가 수립되기에 이른다.

### 3. 김대중의 기회론

북한위협을 강조하는 박정희 정부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은 야당 정치지

22) Telegram 218011 to American Embassy Seoul, “ROK Emphasis on North Korean Threat,” December 2, 1971, POL KOR N-KOR S, Central Files 1970-73, RG 59, NARA.

23) Telegram 398 to American Embassy Seoul, “President's Comments on Internal Security,” January 22, 1971, POL 23-7 KOR S, Central Files 1970-73, RG 59, NARA.

24) Telegram 218011 to American Embassy Seoul, December 2, 1971.



도자 김대중에게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공통점 때문인지 미 행정부 관리들은 그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1970년 작성된 미국외교문서에 그는 “진지하고, 온건하며 사려 깊은 정치인”으로 “일관되게 합리적이고 온건한 입장을 취해왔다”라고 묘사되고 있다.<sup>25)</sup> 또한 미 행정부 관리들은 그가 신민당의 유력한 대통령선거 후보로서 “그의 견해에 관심을 가질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sup>26)</sup>

1970년 9월 신민당 당내경선에서 김대중은 유력한 경쟁자였던 김영삼을 제치고 대통령 후보에 선출되었다. 대통령 후보에 선출되기 이전부터 김대중은 안보 및 통일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해왔다. 예를 들어 1966년 7월 1일, 국회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김대중 의원은 국제정세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내다보았다.

국제적으로 두 개의 중국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 지금 세계 각국들은 거의 현실을 토대로 한 국제문제의 처리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두 개의 한국, 두 개의 독일, 두 개의 월남,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정세는 자유·공산 어느 쪽에도 결정적으로 승리를 얻기가 어려운 정세하에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가장 신뢰했던 유엔은 날로 다각화해가고, 우리가 가장 의지했던 미국의 영향력은 날로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1966년 당시는 데탕트의 기류가 아직 확실하게 형성되기 이전이었음을 감안하면 김대중이 다가올 국제적 긴장완화의 흐름을 상당히 정확하게 감

25) Memorandum of conversation, “Calls in the Department by Kim Tae Chung, National Assemblyman, New Democratic Party, February 27 and March 3, 1970,” March 3, 1970, POL KOR S, Central Files 1970-73, RG 59, NARA; A-506 from American 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Biography of Kim Tae-chung,” December 17, 1970, POL 6 KOR S, Central Files 1970-73, RG 59, NARA.

26) Memorandum for Mr. Kent Crane, Office of the Vice President, “Reply to Letter from Kim Dae Jung, Republic of Korea National Assembly, Seoul, Korea,” April 23, 1970, POL KOR-US, Central Files 1970-73, RG 59, NARA.

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현상유지를 기조로 하는 국제적 조류 속에서 “통일에 이로운 여건이 온다는 것은 희박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통일이 “민족자주적으로” 추진된다면 “어떤 외국도 이것을 방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박정희 정부가 통일문제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고 통일논의의 활성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박정희 정부가 통일문제 논의는 “70년대 후반기에나 하자”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통일 및 남북교류에 대한 논의 자체를 용공시하여 금지하고 있지만, “통일문제는 한시도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미 북한이 “1965년 1월에 남북한 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통일공세”를 펼치고 있고, 국외적으로 서독은 같은 분단 국이지만 한국에서와 달리 통일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동서 양독의 활발한 접촉과 화해 현상은 ... 우리에게 큰 자극”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문제가 방치된다면 “북괴의 통일공세에 패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학생은 물론, 통일을 원하는 국민으로부터 본의 아닌 커다란 오해와 불신을 받아 가지고 우리 스스로 통일에 대한 기피자 또는 사실상의 반대자로 몰려 우리 사회는 중대한 정치적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sup>27)</sup> 김대중은 1967년에도 남북 기자교류 및 서신교환 그리고 통일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회의를 제안하는 등 통일문제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sup>28)</sup>

27) 「통일논의를 용공으로 몰지 마라」, 『후광 김대중 대전집』[이하 『대전집』] 제3권 (서울: 중심서원, 1993), pp. 21-28; 김대중, 「70년대의 국내정국: 3선거전은 헌정의 최저약속을 깬 것은 짓」, 『대한일보』 1970년 1월 10일, 『대전집』 제7권, pp. 83-86.

28) Memorandum of Conversation, “Calls in the Department by Kim Tae Chung, National Assemblyman, New Democratic Party, February 27 and March 3, 1970,” March 3, 1970, POL KOR S, Central Files 1970-73, RG 59, NARA.

다른 한편으로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김대중은 박정희 정부가 북한의 위협이나 통일문제를 이용하여 정권의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1969년 그는 박정희가 대통령직의 세 번 연속 중임을 금지하고 있던 헌법을 고쳐 장기독재체제를 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삼선개헌에 강하게 반대했다. “3선에 성공하면 아마 박 정권은 2, 3년 내에 틀림없이 북괴를 병자하거나 통일의 성취를 운운하면서 나치스 독일이나 대만 같은 총통제를 들고 나올 것이다. 까다로운 개헌 따위는 아예 집어치우고 ‘히틀러’의 수권법과 같이 비상특별법을 국민투표의 형식을 빌어 해치울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이 강조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도 “북괴의 남한 적화음모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며, 북한이 “남한을 제2의 월남화하려는 무장 게릴라의 침투에 주력할 위협이 농후하다”고 인식했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의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며 “70년대 초에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미군의 철수 개시는 더욱 정국을 불안 속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김대중은 국제정세의 흐름, 특히 “미·소의 협조, 중국의 자중 경향으로 보아 북괴 전면 남침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였다.<sup>29)</sup> “세계는 지금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가고” 있으며, 소련과 중국이 모두 “김일성이가 쓸데없는 짓을 하면 일본이 재무장하기 때문에” 북한의 전쟁 기도를 막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 아래 김대중은 “김일성이는 앞으로 10년 내에는 대한민국을 침략하지 못해요. (...) 김일성이는 그럴 힘이 없어”라고 단언하였다.<sup>30)</sup>

29) 김대중, 「70년대의 국내정국」, 1970년 1월 10일.

30) 「여러분! 청와대에서 만납시다」, 장충단공원 대통령 선거유세, 1971년 4월 18일, 『대전집』 제11권, pp. 63-64.

그가 보기에 북한의 대남전략은 전면남침보다는 게릴라 침투 활동에 중점을 둘 것이며, 따라서 한국의 취약점은 대내적 차원의 경제 및 정치 문제였다. 그는 “한국민이 유례없이 반공의식이 투철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일방 박 정권의 독재정치, 특권경제, 부패, 절망사회 조성의 비정, 특히 게릴라 침투의 대상지인 농촌경제의 총파탄은 북괴의 야욕 달성을 위해 절호의 비무장지대를 조성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대중에게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안보의 문제였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김대중이 생각하는 안보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구현에 있었다.<sup>31)</sup>

다시 말해서 김대중은 반공 자체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민주주의에 보다 충실을 기해야 반공의 기반이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진정한 반공은 공산주의 혐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나 군사력의 강화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자유의 신장, 경제적 분배의 균형, 부패 없는 정부 등 자기 체질의 강화를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sup>32)</sup> 김대중의 이러한 주장은 1960년대 후반 이래로 점차 군사적 차원의 대결에서 정치전 및 사상전 차원이 점차 두드러지게 강화되어가던 냉전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sup>33)</sup> 그는 당시의 베트남 전쟁을 “본질적으로 (...) 민족 내부에 있어서의 민족 간의 내전이고 민족 간의 내전은 무력전쟁이 아니라 (...) 정치전쟁”이

31) 「70년대의 국내정국: 3선개헌은 헌정의 최저약속을 짓밟은 짓」, 『대한일보』 1970년 1월 10일, 『대전집』 제7권, pp. 83-86에 재수록.

32) 「내가 걷는 70년대」, 서울 외신기자 구락부에서의 연설, 1970년 5월 12일, 『대전집』 제9권, pp. 22-23.

33) 1970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 안보문제 심포지움에서 서울대 문리대의 박준규 교수는 “70년대 한국안보의 주요과제는 종전의 군사력 위주의 상황에서 정치적, 심리적 요소의 비중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준규, 「기조논문」, 『국제정치논총』(1970년 12월), 제10집, p. 138.

라고 이해했고, 더 나아가 “공산당과 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전이요, 내전은 정치의 싸움이요, 정신의 싸움”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김대중의 연설과 글에서 이상과 같은 견해는 반복해서 표현되었을 뿐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강화되었다. 특히 데탕트로 표현되는 국제정세의 변화가 한국에 있어서는 심각한 안보위기를 가져왔다는 박정희의 인식과는 대조적으로 김대중은 데탕트가 한반도 긴장완화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판단했다.

첫째, 김대중은 서독 사민당 정부의 브란트총리가 추진한 동방정책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 “우리도 ‘아시아의 서독’의 길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4)</sup> 그는 동방정책의 요체를 현상유지 속의 평화 추구라고 보았지만, 동시에 현상유지가 꼭 현상고착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교류 증진을 통해 궁극적인 통일을 향해 나아가려는 시도라고 파악하였다. 즉, 서독정부는 “일단 현 단계에서 통일을 포기했지만 그 대신 (...) 동독을 그대로 인정하고 준국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독하고 교류를 확대해 나가면 (...) 서로 동일성이 형성되고 (...) 이렇게 해서 어느 시기에 가 독일민족끼리 통일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것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계산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김대중은 이러한 정책을 한반도에도 적용하여 남북한의 현상이 유지되어 평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류를 확대하여 장래의 통일의 기초가 놓이기를 희망했다.<sup>35)</sup>

둘째, 박정희가 강조하던 주한미군 철수문제의 심각한 위협성에 대해서 김대중은 한편으로는 “닉슨 정부의 미 아시아 정책 특히 월남정책은 너무도

34) 「공화당 정권 10년의 실정(失政)을 통박하며」, 기자회견, 1971년 1월 23일, 『대전집』 제15권, p. 31.

35) 「삼단계 통일 방안」, 1972년 6월 6일, 『대전집』 제3권, pp. 97-100.

급격한 변화와 조급한 집행으로 일종의 아시아 포기 내지는 패퇴의 인상을 주어 공산주의자를 크게 고무하는 반면에 자유 인민을 실망과 불안 속으로 떨어지게 하는 혐의”가 크다고 지적했다.<sup>36)</sup>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우리 한국의 방위에 대한 공약을 그 의무를 지키겠다고 누누이 다짐하고” 있고, “미국이 지금 한국을 버린 것도 아니고 한국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공산당 아가리에다가 넣어 놓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요, (...) 우리 국군의 사기나 능력이나 우리 국민의 반공의식이 김일성이를 그렇게 두려워할 정도도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김대중이 주한미군 철수 이후의 안보상황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했음을 보여준다.<sup>37)</sup>

셋째,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김대중의 견해는 한국이 강대국 간 흥정과 권력정치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박정희 인식과 매우 달랐다. 그는 오히려 미중접근이 “한국에 있어서 전쟁억제·긴장완화 이러한 방향으로 커다란 영향이 올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라고 인식했다. 중국과 소련이 모두 세계적인 긴장완화에 이해관계와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이 “현상을 유지하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sup>38)</sup> 김대중은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대해서도 아시아의 긴장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sup>39)</sup>

36) 「아시아의 안정과 새로운 한미관계의 수립」,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의 연설, 1970년 3월 10일, 『대전집』 제9권, p. 16.

37)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질문」, 제74회 제4차 국회 본회의에서의 발언, 1970년 7월 13일, 『대전집』 제14권, pp. 140-141.

38) 「변화하는 세계와 한반도」, 1972년 3월 11일, 『대전집』 제3권, p. 59.

39) A-107 from American 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The Return of KIM Tae-chung the Campaigner,” March 24, 1972, POL 12 KOR S, Central Files 1970-73, RG 59, NARA.

1971년 4·27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 김대중은 안보 및 통일과 관련하여 당시로서는 상당히 과격적인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박정희 정부의 외교가 “진정한 민족의 안보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정권안보”만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을 전쟁 애호국가로 전락시키고 세계로부터 고립과 경원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민족외교’를 제창하였다. 민족외교는 “민족의 영예와 이익을 증진”하자는 것이었으며, 또한 국제적 데탕트의 “물결을 탄다”는 취지도 있었다.<sup>40)</sup>

김대중이 제시한 민족외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남북한 관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이다. 김대중 후보는 “70년대에 통일이 이루어질 전망은 크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까지와 같은 폐쇄적 무거래상태는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남북 간의 서신교환, 기자교류, 체육경기 등 비정치적인 직접 접촉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평화유지와 안전보장을 위한 노력으로서 북한에 대해 “서로 전쟁에 의한 통일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며 간첩과 테러분자를 침투시키는 것을 일절 지양”할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미·소·일·중공 등 4대 국가에 대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를 공동으로 보장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셋째, 이념에 지나치게 사로잡히지 않는 탄력적인 외교를 제안하면서 “지금까지의 쇄국주의적 외교를 지양하고 중립국 외교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와 직접 적대관계에 있지 않는 공산권과의 외교관계를 신중히 모색”할 것을 주장하였다.<sup>41)</sup>

40) 김대중, 박명림, 「민주적 시장경제와 평화공존에의 여정: 대한민국정부수립 60주년 김대중 전대통령 인터뷰」, 『역사비평』(2008), p. 43.

41)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서의 포부」, 1970년 10월 16일, 『대전집』 제15권, pp. 23-24; 「개발독재에서 대중시대로」, 호창운동장 대통령 선거유세, 1970년 11월 14일, 『대전집』 제11권, pp. 48-50; 「공화당 정권 10년의 실정(失政)을 통박하며」, 1971년 1월 23일.

아울러 김대중 후보는 향토예비군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향토예비군은 1968년 북한의 대남무력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조직되었으나, 김대중은 그 설립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향토예비군은 “국민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경찰의 보조기관으로 전락하여 선거에 동원되는 등 “정치에까지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sup>42)</sup>

박정희는 안보와 통일문제에 대한 김대중의 주장을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우선 북한이 적어도 10년간은 전면전을 도발하지 않을 것이며, 그 대신 게릴라침투에 주력할 것이라는 김대중의 주장에 대해서 박정희는 북한의 야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공박하였다. 북한의 전략은 게릴라 침투를 통해 후방을 교란함으로써 전방의 우리 군 전력에 후방 치안에 투입되도록 하고 그로써 전방의 방어태세가 허술해지면 그 기회를 노려 전면적 침공을 하려는 것인데, 김대중은 이러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향토예비군 폐지 같은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sup>43)</sup>

박정희는 4대국 안전보장론에 대해서도 “우리의 운명을 이웃나라에 맡기고 의존해 살아보겠다는 무기력하고도 비굴한 자세”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sup>44)</sup> 더욱이 적성국인 소련이나 중국에 한국의 안보를 맡기겠다는 주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였다.<sup>45)</sup> 박정희는 역사적 사례를 들어 자신의 비판을 뒷받침했다. “1938년 체코의 영토 보존을 보장한 유럽 4대국의 뮌헨 협정이 침략자의 야욕을 부채질하여 끝내는 세계대전의 비극

42) 「개발독재에서 대중시대로」, 1970년 11월 14일; 「공화당 정권 10년의 실정(失政)을 통박하며」, 1971년 1월 23일.

43) 「4.27 대통령선거 청주 유세 연설」, 1971년 4월 21일.

44) 「4.27 대통령선거 광주 유세 연설」, 1971년 4월 22일.

45) 「4.27 대통령선거 제 1차 방송」, 1971년 4월 23일.

을 초래하였고, 1945년 7월, 우리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연합국의 포츠담 선언도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국토의 분단과 6·25의 참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이러한 역사로부터 “침략의 기회를 노리는 자에게는 이른바 열강의 보장이나 공약이 아무런 실효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sup>46)</sup>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박정희는 “지금 이 시기는 결코 태평세월이 아니며, “최근 국제 정세의 변화를 행여 주체성이 없이 안이하게 받아들이는 무책임한 발언이나, 북괴의 허위 선전에 말려드는 듯한 언동이 우리 국민 일부에라도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라고 경고하였다.<sup>47)</sup> 박정희는 특히 야당이 “국가안보상의 중대 문제를 당리당략으로 악용”하여 무책임한 안보론으로 민심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보았다.<sup>48)</sup> 가령 1971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던 당시 벌어지던 대학생들의 교련반대 데모와 관련하여 북한의 “간접 침략의 마수가 일부 뻗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럼에도 야당이 이에 “편승해서” 교련의 즉각 폐지를 내세우며 학생들을 선동하고 있다면서<sup>49)</sup> “철없는 학생들을 무책임하게 선동하여 그들의 고귀한 전도를 희생”시키지 말라고 주문하였다.<sup>50)</sup>

46) 「제23회 국군의 날 유시」, 1971년 10월 1일.

47) 「제23회 국군의 날 유시」, 1971년 10월 1일.

48) 「4.27 대통령선거 대구 유세 연설」, 1971년 4월 17일.

49) 「4.27 대통령선거 수원 유세 연설」, 1971년 4월 20일.

50) 「학원질서회복에 즈음한 담화문」, 1971년 10월 30일.

#### 4. 남북대화와 북한의 통일전략

앞에서 지적했듯 박정희는 1960년대 후반 북한의 무력도발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했다. 전면전보다는 게릴라 투입을 통한 후방교란이 보다 현실적 위협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박정희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박정희는 북한이 전쟁준비를 완료하고 있으며,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무력 침략을 감행할 것이고 강조했다. 박정희의 이러한 설명은 일견 모순적이다. 북한위협에 대한 자신감과 경계심이 함께 강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순과 관련해서 미 국무부나 김대중은 박정희가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국내정치적 목적, 즉 정권안보유지에 있다고 생각했다.

박정희 정부가 1970년 8·15선언을 통해 대북정책의 전환을 선언하고, 이듬해 8월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 데 이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 김대중은 이번에도 박정희가 남북관계를 이용하여 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의심했다. 김대중은 7·4 남북공동성명에 대해 자신이 그동안 남북교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만큼 “원칙적으로는 이를 지지 환영하면서도,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할 자격이 없으며, 또 그는 지금 민족의 성스럽고 중대한 과업을 자기의 영구집권에 악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혹의 첫째 근거는 “영똥한 정책전환”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통일논의와 남북교류 주장을 비판하던 박정희가 갑자기 정책을 전환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김대중은 또 다른 의혹의 근거로 박정희 정부가 1971년 12월 6일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와 12월 27일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국가보위법을 유

지하고 있음을 들었다. 김대중은 정부가 비상사태선포와 보위법을 통해 시민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제한하였지만, “이제 북한과의 타협으로 전쟁과 일체의 도발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 조인하였을 뿐 아니라 평화적 교류와 통일을 위한 대화조차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비상사태는 철회되고 보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박정권은 이의 폐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현실과 전혀 배치된 반공법의 개폐 또한 반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자세는 남북대화에 임하는 정부의 근본목적이 “정치·경제·외교의 모든 부분에서 벽에 부딪힌 끈경을 모면하고 국내에서의 독재체제 강화 및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에 악용하려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sup>51)</sup>

김대중의 이러한 비판은 일면 타당하며, 또한 유신체제의 수립을 예견했다는 점에서 놀랍다. 하지만 그의 비판은 박정희의 입장에서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것이기도 했다. 당시 한국 정부가 남북대화에 나선 이유는 결코 북한과 타협한다거나 통일을 향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있지 않았다. 따라서 “엉뚱한 정책전환”을 거론하며 남북대화에 임하는 박정희 정부의 진정성을 문제 삼은 김대중의 비판은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똑같은 이유에서, 대내적 통제조치 완화 내지 해제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전제, 즉 “북한과의 타협으로 전쟁과 일체의 도발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 조인하였을 뿐 아니라 평화적 교류와 통일을 위한 대화조차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남북대화가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전쟁과 일체의 도발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없었고, 박정희 정부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 교류와 통일을 향한 어떤 단계적으로 성과를 얻으려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51) 「7·4 남북공동성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의 외신기자회견 회견문, 1972년 7월 13일,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서울: 한길사, 1994), pp. 299-305에 수록.

박정희 정부에게 남북대화는 북한과의 타협이 아니라 “대화 없는 대결에서 대화 있는 대결”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그리고 대화의 기본 목적은 전쟁 재발을 방지하거나 최소한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것이었다. “상대방의 한쪽 손을 맞대고 있으면 그들이 우리를 치려고 할 때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다.<sup>52)</sup> 박정희는 북한과의 대결에서 장기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을 향한 ‘중단 없는 전진’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필요로 했다. 그런데 닉슨 독트린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 같은 미국의 정책변화가 나타났고, 이에 박정희는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이 무한정 지속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통일문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킨 김대중의 선거캠페인 등의 영향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여론의 압력이 높아지는 국내적 흐름도 나타났다. 박정희는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남북대화로 대응함으로써 국력의 계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정적 환경과 시간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sup>53)</sup>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박정희는 남북대화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내적 긴장이완을 우려했다. 적과 대화하는 동안 적에 대한 경계의식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미 국무부정보조사국의 1971년 12월

52)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성진은 박정희가 적십자회담 실무회의가 담보 상태에 이르렀을 때 회담진전을 위해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이 말을 자신에게 했다고 적고 있다. 김성진, 『박정희를 말한다: 그의 개혁 정치 그리고 과잉충성』(서울: 삶과 꿈, 2006), p. 121.

53) Telegram 5309 from American Embassy Seoul, “Korean CIA Director's Views on Red Cross Talks,” August 31, 1971, POL KOR N-KOR S, Central Files 1970-73, RG 59, NARA; 강상욱, 강인덕, 정홍진, 송종환, 「좌담: 남북한체제경쟁선언: 8·15 평화통일구상 선언 비화」, 『신동아』(2003), 8월호; 신종대, 「유신체제 수립원인에 관한 재조명: 북한요인의 영향과 동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2005), 제13집 1호, p. 150.

3일자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남북한 모두 관계 개선 움직임 속에서 동일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들의 대내 및 대외정책은 대체로 비무장지대 위 또는 아래로부터의 직접적 위협이 존재한다는 전제에 근거해왔다. 남북접촉은 그것이 아무리 제한적이라도 이러한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만약 위협수준에 대한 의문 제기가 대내적 갈등과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면 남한이나 북한의 지도부는 대화 중단을 결심할 가능성이 크다.<sup>54)</sup>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바로 남북대화가 가져올 긴장이완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성격의 조치였다. 비상사태선포 직전 이후락은 하비브(Habib) 주한미국대사와의 대화에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인정하였다.<sup>55)</sup> 김종필 국무총리 역시도 같은 의견이었다.<sup>5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듬해 유신체제수립에 나아갔던 기본적인 이유는 남북대화에 따른 긴장이완이 북한과의 대결의식 자체를 부식시켜 장기적 차원에서의 북한과의 체제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물론, 단기적으로도 북한의 대남전략에 유리한 상황이 국내적으로 조성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sup>57)</sup> 박정희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과연 우리의 내부 사정은 어떠한지 냉엄하게 살펴”보자면서 “태평 무드에 젖어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의 단면”을 지적하고,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 불안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박정희의 걱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sup>58)</sup>

그렇다면 1970년대 초 북한의 대남전략은 무엇이었으며, 이에 대한 박정희 정부의 인식은 어떠한가? 당시 중앙정보부의 남북대화 실무책임자였던 정홍진은 남북대화에 나선 북한의 의도와 관련하여 “1970년대 초에도 북한은 우리 정부를 공산화 통일을 위한 상층통일전선전술의 대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 정부와 연방제와 군사문제 우선해결을 합의하여 반공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만 하면 북한식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회고하였다.<sup>59)</sup> 정홍진의 언급은 1970년대 초 당시 박정희 정부가 북한의 대남전략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인식은 동유럽 구공산국가의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되는 북한의 실제 대남전략 및 의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김일성은 1971년 6월 10일 평양을 방문한 루마니아의 차우체스크(Ceausescu)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통일전략을 설명했다. 그는 통일이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무력에 의한 통일 기도는 세계전쟁 촉발 가능성을 우려하여 중국과 소련 모두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통일을 이루려면 남한에서의 혁명역량 성장과 주한미군 철수의 조건이 충족

54) REAN-69, “Talk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Red Cross Societies: Prospects, Motives, and Problems,” December 3, 1971, POL KOR N-KOR S, Central Files 1970-73, RG 59, NARA.

55) Telegram 7312 from American Embassy Seoul, “ROK Emphasis on North Korean Threat,” December 3, 1971, POL KOR N-KOR S, Central Files 1970-73, RG 59, NARA.

56) Telegram 7318 from American Embassy Seoul, December 4, 1971, POL KOR N-KOR S, Central Files 1970-73, RG 59, NARA.

57) 마상윤, 「안보와 민주주의 그리고 박정희의 길: 유신체제 수립원인 재고」, 『국제정치논총』(2003), 제43집 4호, 특히 pp. 184-190.

58)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즈음한 특별담화문」, 1971년 12월 6일. 비슷한 맥락에서 박정희는 북한의 무력도발이 1968년을 정점으로 이후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 상황을 그 이전보다 오히려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바 있다. 1969년 8월 샌프란시스코 한미정상회담에서 닉슨이 “근래에 와서 김일성의 태도가 좀 누그러진 것 같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한 데 대해 박정희는 “북괴가 노골적으로 나오면 이에 대처하기가 용이하지만 오히려 조용히 있으면 그들의 기도를 알기가 어려우니 더욱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보다 위험하다고 봅니다”라고 대답한 것이다. 「한·미정상간 제2차 단독회담 요약」, 1969년 8월 22일.

59) 「좌담: 남북한체제경쟁선언: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비화」, 『신동아』(2003), 8월호.

되어야 하며, 이 모든 것은 박정희가 제거되고 남한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수립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박정희의 정치적 경쟁자인 김대중이 비록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통일에 대한 입장은 북한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김일성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나면 한국 국민들 스스로의 진보적 민주정부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북한은 싸우지 않고도 한반도 공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sup>60)</sup>

김일성은 또한 미중관계 개선이 통일에 대단히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1971년 7월 키신저의 중국 방문 직후 주은래는 7월 15일에서 17일간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에게 키신저와의 회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7월 9일 회담에서 키신저는 주은래에게 “베트남전 종전 이후 미중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할 경우 닉슨 대통령의 임기 내에 주한미군 전력 대부분의 철수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으며,<sup>61)</sup> 이 내용이 김일성에게 전달되었음은 틀림없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김일성은 적극적으로 한국과 국제여론을 겨냥한 평화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심지어 북한은 한국이 미국 및 일본과의 양자조약을 폐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자신이 소련과 맺고 있던 우호조약을 폐기하는 방안을 소련과 협의하기까지 했다.<sup>62)</sup>

1972년 남북의 합의하에 발표된 7·4공동성명은 통일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희망적 전망을 더욱 강화시켰다. 비록 당장 사회주의에 입각한 통일이

60) Bernd Schaefer, “Overconfidence Shattered: North Korean Unification Policy, 1971-1975,” Working Paper #2,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December 2010), pp. 4-5.

61) Memo of Conversation between Zhou Enlai and Kissinger, July 9, 1971,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2, Vol. XVII, China 1969-1972*, p. 390.

62) Schaefer, “Overconfidence Shattered,” pp. 7-10.

가능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지만 이 목표를 향한 첫 발로서의 새로운 남한정권의 수립 전망은 희망적이라고 보았다. 특히 북한의 평화공세로 한반도에 긴장완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이 민주세력을 억압할 수 있는 구실을 쉽게 찾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남북대화가 지속되고 확대되어 보다 많은 남한사람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질수록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남북대화를 통해 시간을 벌려는 박정희 정부의 노력은 불리한 국내외정세 속에서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북한 지도부는 북한체제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도 북한체제를 더 선호한다고 믿었던 것인데, 이러한 믿음에 근거해 선거를 통해 박정희 정부가 제거된 후 남북한 총선거를 거쳐 친북성향의 통일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곧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sup>63)</sup>

이렇게 북한은 국제 데탕트를 활용한 평화공세 강화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한국의 정권교체를 촉진하고자 했다. 북한의 이러한 대남전략은 물론 남한정세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웠다. 즉 한국 국민들이 박정희 정부에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동조세력이 폭넓게 존재한다는 판단은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것이었다.<sup>6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탕트의 흐름 속에서 북한이 공산화 통일을 위해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했던 점은 같은 시기 박정희 정부가 지녔던 안보위기의식과 쌍을 이루며 긴밀하게 조응하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는 곧 박정희의 위기론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비록 박정희가 북한의 대남전략

63) Schaefer, “Overconfidence Shattered,” pp. 12-13.

64) Schaefer, “Overconfidence Shattered,” p. 29.



이 갖는 맹점과 한계를 인식하지 못했고, 그럼으로써 냉전을 뛰어넘는 획기적 비전까지 제시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남북한 냉전의 한 당사자로서 박정희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며 비교적 충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국가안전보장의 직분을 다하려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5. 나가며

1970년대 초 국제적 데탕트의 물결은 한반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아시아 개입 축소 정책으로 한국에 대한 안보지원도 축소될 것을 우려했다. 미국의 중국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은 동맹국 미국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렸다. 이러한 가운데 박정희는 강대국 간의 긴장완화가 오히려 한국과 같은 주변국에는 위기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북한의 위협은 변함이 없는데, 더 이상 동맹국으로부터의 외부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정희는 자립경제기반을 갖추고 자주국방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과의 대화도 시도되었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의 교류와 통일의 모색이라기보다는 위기 상황에서 시간을 벌려는 데 기본 목적이 있었다. 한편 박정희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적 '총화단결'을 주장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나아가 유신체제를 수립하여 대내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김대중은 박정희가 정권안보를 위해 안보위기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박정희가 미중접근과 같은 강대국 간 야합 과정에서 한국의 핵심이

익이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김대중은 4대국 안전보장론을 내세우며 주변강국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한반도 평화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적 데탕트는 강대국 간 각축을 방지하여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인식했다. 또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북한의 침공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그런데도 박정희가 중대한 안보위협을 이유로 대내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는 자신의 실정으로 인해 발생한 국내정치적 도전을 잠재우고 영구집권을 준비하기 위해 안보위기를 부풀려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김대중은 박정희 정부가 남북대화에 나선 근본 동기에 대해서도 영구집권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의심했다. 박정희가 실제로 종신집권이 가능한 유신체제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김대중의 예견은 적중했으며, 그의 박정희 비판논리는 오늘 까지도 널리 공유되고 있다.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문제를 이용한다는 것은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즉 안과 밖의 상호작용에 관한 하나의 설명방식이다. 그러나 안과 밖의 상호작용은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사람들의 마음(hearts and minds)을 얻는 정치적 포섭의 문제는 그 자체로는 국내정치의 문제로 그칠 수 있겠지만, 정치전 및 사상전의 성격이 두드러지던 데탕트의 맥락에서는 대외안보의 문제로 전화되어 인식되기 쉬웠다. 대내안보와 대외안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이다.

김대중의 비판에 대해 박정희는 김대중이야말로 정권욕에 사로잡혀 무책임한 안보론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위기는 실재하며, 있는 위기를 없다고 주장하여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이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이

다. 당시 북한이 대남무력침공보다는 박정희 정부의 제거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해 남한 및 국제여론을 향한 평화공세에 집중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박정희가 북한의 전면전 도발 가능성을 강조한 것은 군사적 위협을 과장한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박정희가 보다 더 두려워한 위협은 대내적인 긴장이완이었다. 북한의 평화공세는 무력도발보다도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으며, 이를 견디낼 대내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북한이 국제적 데탕트 조류에 편승해 평화공세를 강화하면서 한반도 공산화를 자신하고 있었던 만큼 박정희의 위기감은 어느 정도의 현실성을 가지고 있었다. 박정희의 위기론이 정권안보용이었다고만 볼 수 없는 이유이다. 다만 북한의 통일전략이 한국 국민들의 통일희구를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반대와 북한에 대한 동조로 등치시키는 잘못된 전제에 근거하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힘들었다는 최근의 평가를 놓고 보면,<sup>65)</sup> 박정희가 북한의 선전선동을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두려워했다는 분석이 가능할지 모른다.

---

65) Schaefer, "Overconfidence Shattered," p. 29.

## Danger and Opportunity of Détente: Park Chung Hee, Kim Dae Jung and their Views of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in the Early 1970s

Ma, Sang-Yoon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Facing the wave of international détente in the early 1970s, President Park Chung Hee believed ironically that the relaxation of tension in great power relations brought crises for small countries like South Korea. Under pressure from the perceived weakening of US security commitment and the constant threat from Communist North Korea, Park strove for self-reliant economy and defense. He also started talks with the North as a way to buy time. In addition, he strengthened domestic control, stressing the need of national unity to cope with the crisis. His political opponent Kim Dae Jung criticized Park's apparent inf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crisis for the sake of regime security. Kim believed that détente reduced the chance of conflicts among great powers and, thereby, heightened the prospect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o him, North Korean attack seemed only a remote possibility. He also suspected Park started North-South talks to ensure his life-long seizure of power. At the time, in order to promote the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Korea and the removal of Park Chung Hee regime, North Korea concentrated on peace offensive rather than military offensive. In view of this unification strategy of North Korea, it is admitted that Park exaggerated the North Korean military threat. Given Park's great fear of North Korean peace offensive and the relaxation of domestic vigilance against it, however, it is hard to conclude that his warning of crisis was only for regime security. Yet, North Korea's unification strategy was based on an illusionary premise of equating South Koreans' aspiration for unification with preference for the North. This leaves a question if Park was excessively fearful of North Korean agitation.

•Keywords

détente, Kim Dae Jung, North Korea, Park Chung Hee, security